



[뉴스]
매물 절벽 전셋값 경총
사상 최악
전세대란 오나
02



코스피 3296.68 (+10.00)	↑	코스닥 1029.96 (+7.44)
금리 (국고채 3년) 1.448 (-0.011)	↓	환율 (원·달러) 1126.10 (-2.40) (6.30)

이슈 분석 고교 교육과정 벗어난 수능 문제

고교 교육수준에서 벗어난 수능 · 모의평가 문제가 출제된 것에 대해 교육계 내에서도 엇갈린 해석이 나오고 있다.

입시 문제에서 학교 교육만으로 대비할 수 없는 문항이 출제되면 교육 공공성 가치를 훼손하고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우려가 나오는 반면, 학생의 문제 접근·해결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독일·프랑스·미국 등 주요 선진국처럼 창의적인 문제를 제시하는 등 학생 평가에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학부모·교수 “공교육 만으로 대비 불가능 사교육 전적 의지”

“공교육 가치 훼손” VS “창의적 접근 필요”

30일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각세)에 따르면 지난 3일 치러진 6월 모의평가 수학영역 공통 과목과 선택과목의 총 46개 문항 중 6개 문항이 고교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사각세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주최로 현직 교사와 전문가 등 15명이 수학영역을 3주간 분석한 결과다.

◆ 사각세, 선행교육규제법 적용 대상에 수능 포함 촉구

당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 경향과 난도에 가장 가까운 시험으로 꼽히는 6월 모의평가에서 고교 교육 수준을 벗어난 문제들이 출제되면서 일부에서는 ‘교육과정 위반’ 문제를 제기한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 정문 앞에서 ‘2022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수학영역의 교육과정 준수 여부 분석 결과 및 수능 출제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일부 교육계 “선진국형 문제로 학생 ‘생각하는 힘’ 위주 평가”

출제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문제가 출제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 교육규제법) 적용 대상에 수능도 포함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현재 선행교육규제법에서는 학교와 대학의 경우에만 입학전형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 출제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국가에 대해서는 선행문제 출제를 예방하고 지도 및 감독하는 의무만 명시돼 있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2면에 계속)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강준혁·권소완·이원혁·한창대 수습기자



29일 국회 정문 앞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왼쪽 네 번째)이 ‘2022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수학영역의 교육과정 준수 여부 분석 결과 및 수능 출제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창대 수습기자

버스티비 YAP TV 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델타변이 확산 시작됐나… 당국 “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영향” / 사진 뉴시스
- ▲ 백신 1차 접종 1532만명, 전국민 29.8%… 당일 신속예약 32명

‘신용카드 10% 캐시백’ 카드업계, 떨떠름

하반기 소비 진작책 도입 앞두고 업계, 시스템구축 등 역마진 우려

올해 하반기부터 정부가 더 쓴 카드 사용액의 10%를 되돌려주는 ‘카드 캐시백’ 도입을 예고한 가운데 카드업계에서는 마냥 웃을 수만은 없다는 반응이다.

국내 소비 활성화라는 취지에 맞춰 정부정책에 최대한 협조하겠지만 시스템 구축 등 비용 발생으로 수익 증대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상생소비지원금 추진을 예고했다. 민간부문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2분기 월 평균 카드사용액과 비교해 3% 이상 더 지출하면 카드사용액의 10%를 캐시백해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예를 들어 2분기 월 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일 경우, 8월에 150만원을 소비 했다면 50만원에 대해 10%(5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1인당 월별 10만원 한도로 최대 3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전문매장 ▲유형업소 ▲차량구입비 등은 혜택에서 제외된다.

카드업계에서는 이번 캐시백 정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최대한 협조한다는 입장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지만 발표된 내용에 카드사들이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클 것”이라며 “지난해 실시한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소비활성화를 위한 좋은 취지에 공감해 정부에 최대한 협조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정책의 효과로 카드사 이익 증대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이라면 반응이다. 카드 사용실적이 증가하는 효과로 수수료 수익이 커질 수는 있겠지만 기존에 없었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등의 비용이 커 오히려 역마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진행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카드사들은 오히려 손해를 봤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

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8월 중 지급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한 7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의 영업 수익은 973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자비용, 판매관리비, 서버 업그레이드 등 추가 인프라 구축비용 등 카드사 영업비용은 1053억원을 기록하면서 사실상 80억원 가량의 손해를 보게 됐다.

또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캐시백 혜택에 포함된 사용처가 소상공인, 골목 상권 등 중소가맹점으로 제한됐는데, 해당 가맹점은 원가 이하 수준인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사용금액이 증가하더라도 카드사들의 이익이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 카드 사용자들의 사용금액을 모으는 시스템 역시 기존에 없으나 이를 구축하기 위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익 증대보다는 카드사가 사회에 기여한다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영석 기자 ysl@



부동산 광풍에 중개업소 폭발 증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광풍으로 지난해 중개업소 등 부동산 관련 창업에 나선 사람이 44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공개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사업자 수 151만9000명 중 부동산업이 43만9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사진은 30일 서울시내 공인중개사 사무소들이 늘어선 상가.

/뉴스

삼성SDI ‘중대형 배터리’ 드라이브 건다

美 배터리 셀 생산라인 투자 가능성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 추진 논의도

삼성SDI가 ‘소형 배터리 강자’에 이어 중대형 배터리에서도 본격적으로 두각을 나타낼지 관심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SDI가 본격적인 중대형 배터리 드라이브에 나설 전망이다. 삼성SDI는 배터리 가운데 그간 소형 배터리를 주력으로 해왔다. 이에 따라 2005년 소형 배터리의 첫

흑자를 달성했다. 2010년에는 소형 배터리 부문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배터리는 크기와 용량에 따라 소형, 중형, 대형으로 나뉜다. 소형 배터리는 외관의 형태에 따라 원통형, 각형, 파우치로 구분된다. 소형 배터리는 주로 전동공구나 스마트폰, 노트북, 소형 가전 제품에 사용된다. 또, 최근에는 전기자전거나 골프 카트 등으로 적용 분야가 확대하고 있다.

삼성SDI는 최근 전기차 배터리를 포함한 중대형 배터리 부문의 성장세가 두드러지자 이에 대한 투자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전영현 삼성SDI 사장은 지난 6월 9일 열린 인터배터리 전시회에서 “미국 시장 진출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8면에 계속)

/김수지 기자 sjkim2935@



- ▲ 이재명, 대선경선 레이스 시동… 1일 영상 출마 후 TK로
- ▲ 송영길 “대선 경선, TV토론 4회로… 국민에 노출 기회 많이 제공” / 사진 뉴시스